



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으로 이끕니다.

- 범정부·사업주단체 함께 손잡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첫 출범
-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지원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사업주단체와 함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 * ▲ (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주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 (지역 사업주단체) 경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은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쳐,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상황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출범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25.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中 》

Ⅱ.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1) 노사는 불필요한 야근·회의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포스코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사례,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지역 협업 및 범부처 연계 지원 필요성 등이 공유되었으며, 노동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사례 발표 주요 내용 〉

- ① (포스코) 포스코의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
 - ✓ '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 ✓ 산업부·중기부와 협업하여 12년간('14~'25년) 413억원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등 총 2천 건 이상 지원 성과
 - ✓ 향후('26~'27년) 40억원 추가 지원으로 중소기업 DX/AX 가속화
- ② (부산경총)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제조·물류 중심 핵심 경제권이나 산업 둔화·인구 감소·수도권 집중으로 경쟁력 약화 → 개별 기관·지자체 중심의 분절적 정책 대응 한계, 광역·통합 대응 필요
 - ✓ 3대 핵심 과제
 - ①협업 강화: 동남권을 하나의 산업·고용권으로 통합, 지역 간 기능 분담
 - ②협력체계 구축: 기업(수요)+대학(인력 양성)+정부(지원) 연계, 현장 중심 생산성 제고
 - ③범부처 통합 정책: 고용·산업·교육 정책 연계 → 인력 양성~취업~산업 성장 쉼 주기 지원체계 구축
 - ✓ 동남권 광역 이음 프로젝트
 - ①사람 이음: 인재 유입 및 지역 정착 지원 등
 - ②공간 이음: 교통·주가·생활·고용권 통합 조성
 - ③미래 이음: 산업·일자리 고도화 지원

한편, '민·관 생산성 향상 지원단'은 각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캠페인 추진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확산을 지원하며, 지역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대식에 참여한 정부 부처·사업주단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너르마크가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 및 사례 발표회 개요
 - 2. 장관 인사 말씀
 - 3. 사례 발표 자료(요약)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박노완 (044-202-7618)
			사무관	김영덕 (044-202-7618)
			주무관	최주환 (044-202-7530)
			주무관	권소현 (044-202-7543)
담당 부서 <공동>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기업환경팀	책임자	팀 장	이우진 (044-203-4206)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2)
담당 부서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정승화 (044-204-7442)



붙임 1**「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 및 사례 발표회 개요**

- 일시 : '26. 5. 6.(수), 14:00~15:00
- 장소 : R.ENA 컨벤션센터 3층(서울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정 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사업주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지역 사업주단체) 한국표준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 대표
 - (유관기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행사 내용: ①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생산성 향상 관련 주요 사례 발표 등
- 진행 일정(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고
〈1부〉 업무 협약식(30')		
14:00 ~ 14:02	(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14:02 ~ 14:12	(10') 인사말씀	▪ 장만 → 경총 → 중중 → 표준협회
14:12 ~ 14:15	(03') 업무협약 주요 내용 소개	▪ 사회자
14:15 ~ 14:25	(10')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 협약 체결 기관 전원
14:25 ~ 14:30	(05') 장내정리	
〈2부〉 사례 발표(30')		
14:30 ~ 14:35	(05')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공유 등	▪ 배규식 박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4:35 ~ 14:50	(15') ▲생산성 향상 사례,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	▪ 포스코 고관봉 그룹장
14:50 ~ 15:00	(10') ▲지역 협업 사례 및 범부처 연계 지원 필요성	▪ 부산경총 유정민 본부장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님,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님,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님 여러분,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 12월,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 선언’ 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노사정 공동 선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출발점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AI
 확산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더 오래 일하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장시간 일하고 있으며, 투입 대비 생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짜 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는 과거 한국을 성장시킨 장시간 노동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시간) '24년 임금노동자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 OECD 평균은 1,708시간(151시간 차이로 OECD 35개국 중 4위)

* (1인당 노동생산성) '23년 OECD 37개국 21위<제조업 6위, 서비스업 27위>

-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생산성 향상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을 합리화하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의 작은 비효율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입니다.
- 이를 통해 더 안전하게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인간다운 삶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오늘 출범하는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입니다.
-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경총·상의 등
중앙과 지방의 사업주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는 공정 개선 컨설팅, AI·디지털 기술 도입,
직무 재설계와 직업훈련,
그리고 일·생활균형 지원과 각종 장려금까지
기업이 아쉽고 어려운 부분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역별 사업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범부처 합동 설명회와 업종별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성 향상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긴요한 과제입니다.

- 오늘 지원단 출범과 협약 체결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부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산성 향상 사례,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

<포스코>

1 추진 배경

- √ 협력사의 낮은 자동화 수준, 인력 의존 구조, 품질 편차 등 구조적 한계 노정
-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품질·납기 경쟁력 동시 확보 및 공급망 고도화
- * 산업부·중기부와 협업하여 413억원 지원('14~'25년), 향후 40억원 추가 지원

2 추진 체계 및 지원 구조

- √ 대기업 주도의 포스코-협력사 동반성장을 목표로 현장 밀착형 지원
- √ 공정 자동화, 설비 디지털화 및 데이터 기반 생산·품질 관리 체계 구축
- √ 전문가 컨설팅과 디지털·자동화로 제조공정 안정화 및 고도화 지원
- ⇒ 단순 설비 보급이 아닌 “기술·운영·관리 통합 혁신 모델”

3 주요 사례

- ① 자동화 구축 사례: 단순·반복적 수작업 공정 → 자동화 전환
→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단축, 인력 의존도 감소
- ② 품질관리 고도화 사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불량률 감소, 품질 균일성 확보, 비용 절감
- ③ 공정 최적화 사례: 병목공정 개선 및 레이아웃 재설계
→ 작업환경 개선, 납기 준수율 향상, 공정 효율 극대화

4 주요 성과 및 정책적 의의

- √ 생산성 증대 및 원가 절감, 품질 경쟁력 및 납기 대응력 강화
- √ 노동환경 개선 및 현장 만족도 제고
- √ 대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실효성 높은 제조혁신 모델 구축
- ⇒ 단기 생산성 향상과 중장기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

2 지역 협업 사례 및 범부처 연계 지원 필요성

<부산경영자총협회>

1 추진 배경

-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우리나라 제조·물류 중심 핵심 경제권이었으나 산업 둔화·인구 감소·수도권 집중으로 경쟁력 약화
 - ▲ 2023년 기준, 약 108만개 기업 활동 (대부분 소상공인·중소기업)
- ⇒ 개별 기관·지자체 중심의 분절적 정책 대응은 한계 노정 → 광역·통합 대응 시급

구분	내용
산업경쟁력 저하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정체, AI·디지털 전환 대응 미흡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청년 유출·고령화 심화, 숙련 인력 부족 및 미스매치
정책분절·비효율	정부·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지역 간 협력 부족

2 추진 필요성 - 3대 핵심 과제

- ① 협업 강화: 동남권을 하나의 산업·고용권으로 통합, 지역 간 기능 분담
- ② 협력체계 구축: 기업(수요) + 대학(인력양성) + 정부(지원) 연계, 현장 중심 생산성 제고
- ③ 범부처 통합 정책 : 고용·산업·교육 정책 연계로 인력양성 → 취업 → 산업성장 순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요 협업 사례(부산경총 중심)

- ▲ HR Cycle 연계 : 구인·구직 → 직무교육 → 근속지원 선순환 체계 운영
- ▲ 민관 협업 거버넌스 : 부산시·고용노동부·16개 구군·대학·산업계 지역혁신 프로젝트 운영
- ▲ 통합 사업 설명회 : 부산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통합 안내·참여 지원
- ▲ 안전 캠페인 : 광역·기초자치단체 연계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3 동남권 광역 이음 프로젝트(생산성 향상 지원)

- √ 사람 이음 : 핵심 산업 인재 유입·유출 방지, 지역 정착 강화
- √ 공간 이음 : 시도 경계를 넘어 교통·주거·생활·고용권 통합 조성
- √ 미래 이음 : 전통 제조업 AX·DX 전환, 산업·일자리 고도화 지원

4 기대 효과

- 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고도화
-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동남권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 ③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